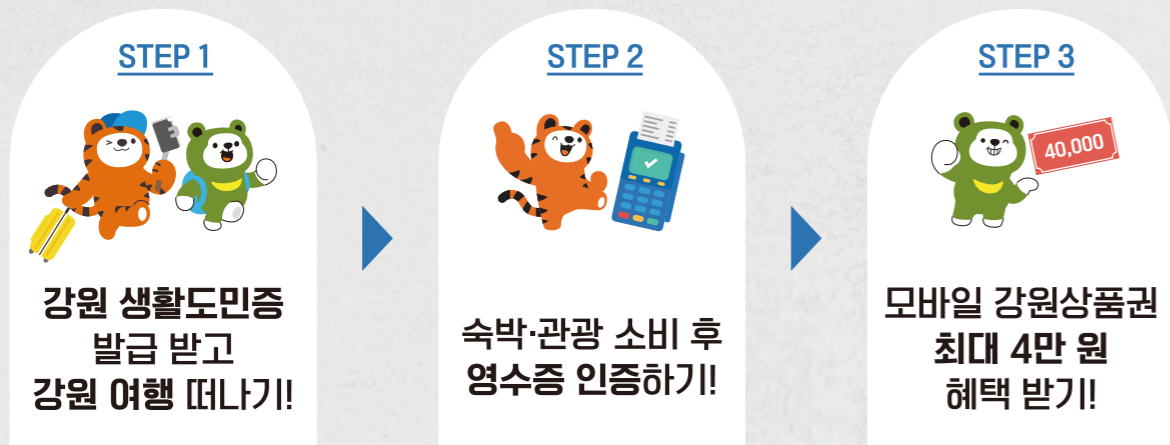


2026 혜택 받GO! 강원 여행
강원 여행 혜택 최대 4만원

노 리 기 바 라 기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외 거주자라면 **누구나**

혜택 조건	숙박 6만 원 이상	▶▶	3만 원
	관광 소비 5만 원 이상	▶▶	1만 원

지원 기간 2026. 2. 23. ~ 9. 3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월 별 선착순 지급

상품권 유효기간 2026. 10. 31.까지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 편

Vol. 138 | 2026. 03

강원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의 기적”은 멈추지 않는다
 ‘강원 방문의 해’가 그리는 새로운 미래
 디지털 트윈 기업 ‘더픽트’
 “가상 공간에서 정책을 실험하다”
 지자체 일본·중국 교류 담당관 회의



www.gaok.or.kr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우리의 생각은
지방분권을 향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협력,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7개 시도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01

시도지사에게 듣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립(而立)’의 지방자치 30년,
‘강원의 기적’은 멈추지 않는다

04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정책

관광객 2억 명 시대의 개막,
‘강원 방문의 해’가 그리는
새로운 미래

주소는 달라도 마음은 강원,
‘강원생활도민’이 만드는
지역의 활력

10



02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 축제

2026 춘천마임축제
강릉단오제

동해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2026 태백천상의
산나물 축제

제59회 단종문화제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2026

제6회 저도 대문어축제

14



03

글로벌 이노베이터

디지털 트윈 기업 ‘더픽트’
전창대 대표

“드론·로봇·AI 데이터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을 돕는다”

18



04

공감 로컬

16개 시도
이슈 & 뉴스

각 지역의 이슈를 공감하고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치를 실현합니다

24



05

협의회 소식

지방 4대 협의체
사무총·차장 간담회

지자체 일본·중국
교류 담당관 회의

국제관계지원실장
이장근 대사 임명

제21기 지방시대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36



정책 포커스

이재명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과제 및 쟁점

‘기본사회’ 정책 동향과 이슈

42

재미로 보는 신기술

에이전틱시,
여기까지 왔다

48



01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립(而立)’의 지방자치 30년,
‘강원의 기적’은 멈추지 않는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궤적: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1995년, 대한민국은 ‘중앙이 주도하던 행정의 시대’를 끝내고 ‘지역이 스스로 발전을 설계하는 시대’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당시 강원도지사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74.77%를 기록했던 것은 내 삶을 바꾸는 행정과 내 고장을 살리는 정치에 대한 강원도민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였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강원도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약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공자는 서른 살을 모든 기초를 세우고 홀로 서는 시기인 ‘이립(而立)’이라 칭했다. 강원도 역시 지난 30년간 세 번의 강산이 변하는 고통과 환희의 시간을 통과하며 자립의 기틀을 닦았다. 경제적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1995년 12.9조 원에 불과했던 지역내총생산(GRDP)은 64.6조 원(2024년 잠정) 시대를 열며 5배 가까이 성장했고, 도 예산 규모 또한 8,000억 원 수준에서 8조 원(국비 포함 10조 원 시대)으로 10배 이상 팽창하며 ‘강원의 기적’을 일구어냈다.

시대적 요구에 응답한 강원 혁신과 도약

강원 지방자치의 역사는 규제와 낙후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과정이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폐광지역특별법 제정과 산업 다각화를 통해 무너져가던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했고, 2000년대에는 열악한 교통 여건 개선과 복지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다.



1 강원형 국방경제 보고회
2 드림프로그램 개회식
3 강원체육 비전 발표



1



2

3

2010년대에 접어들어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는 초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강원도는 세계 속에 그 역량을 각인시켰다. 이제 민선 8기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규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등 ‘7대 미래산업’ 중심의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억 4천만 명 시대를 맞이한 관광 산업과 획기적으로 개선된 교통망은 이제 강원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이자 물류의 거점으로 변모시켰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분권의 실험지’에서 ‘자치의 모범지’로

이 30년 여정의 가장 빛나는 결실은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자립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역사적 선언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 필요에 의해 설치된 타 특별자치시·도와 달리, 도민들의 자발적 요구로 시작되어 국가로부터 특별 지위를 부여받은 ‘최초의 상향식 특별자치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의 시작점이며, 강원도가 대한민국 분권의 실험지를 넘어 자치의 모범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결정적 동력이 되었다.



4 태백365세이프타운 현장방문
5 산불방지 협의회
6 강원소방학교 졸업식

실제로 출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강원도는 농업, 산림, 군사, 환경이라는 4대 핵심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려왔다. 축구장 226개 규모의 절대농지를 해제하여 관광·체육 공공사업의 물꼬를 텃으며, 철원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민통선 복상이 이루어졌다. 반도체 불모지였던 강원에 관련 국비 사업을 유치하며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 것 또한 자치권 강화가 가져온 실질적 변화의 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 물고기 잡는 법을 제도로 정착시켜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은 중앙정부에 단순히 ‘물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에 있다. 이러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강원특별법의 위상 재정립과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 현재 발의된 3차 개정안은 미래산업 육성(19건), 규제 개선(15건), 자치권 강화(6건) 등 총 40개의 핵심 특례를 담고 있다. 정부 수용률이 67.5%에 달할 만큼 논리적 당위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헌법상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이 보장되고, 중앙 사무 이양에 따른 실질적 재원 이전이 병행되어야만 강원특별법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둘째,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자치 모델의 정립이다. 단순히 인구 숫자를 늘리는 단기적 대책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생활·산업·복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원만의 유일무이한 제도인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규제 지역을 거점 관광단지화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강화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안에서 강원도는 한반도의 중심 성장축으로 기능해야 한다.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R&D 및 인재 양성 패키지 권한까지 이양 받아야 진정한 지역 주도의 성장이 가능해진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여는 강원도의 도전

민선 자치 30년의 성과는 강원도 스스로 세운 제도와 정책, 그리고 도민의 열망이 빚어낸 결실이다. 이제 우리는 지난 30년의 성취를 뒤로하고, 향후 30년을 책임질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 사통팔달 물류망 완성, 체류형 관광과 복지 중심의 생활자치 확립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다.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진짜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꾸는 일, 이것이 강원도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도민의 자치, 도민의 미래”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선도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 강원도의 도전은 곧 대한민국 자치의 미래가 될 것이다.



관광객 2억 명 시대의 개막, '강원 방문의 해'가 그리는 새로운 미래

위기를 기회로,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거점이다. 하지만 최근 강원 관광은 중대한 변곡점에서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방문객 수가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고환율과 해외여행 수요 급증 등 대내외적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특히 대규모 국제 행사가 종료된 이후, 관광객들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붙잡아줄 새로운 모멘텀이 절실했다.

이에 강원도는 관광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관광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선포했다. 18개 시군의 개별적인 마케팅을 하나로 결집해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고,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는 관광 수요를 창출하여 도민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다.

수치로 증명된 성장, 가시화되는 마케팅 효과

'강원 방문의 해' 선포 이후, 강원 관광의 지표는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국내 숙박 여행지 점유율 전국 1위(21.6%)를 차지하며 경기도와 경북을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특히 숙박 여행 횟수는 7년 연속 전국 1위를 수성했으며, 실제 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에서도 숙박 결제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는 실제 방문객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2025년 12월 기준 도 방문객은 전년 대비 약 480만 명(3.2%) 증가한 1억 5,460만 명을 기록하여 데이터랩 방문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소비 영수증을 인증하는 '강원 관광 챌린지'와 숙박 할인권을 제공하는 '강원 관광 숙박대전' 등의 참여형 이벤트가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며 집중 홍보 마케팅의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2026년, 재방문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향한 공세적 행보

강원도는 2025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6년에도 더욱 공세적인 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존의 '이달의 추천 여행지'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2026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11억 원을 투입해 3만 3,000장의 숙박 할인권을 발행하는 등 신규 사업을 대폭 확장한다.

또한, 소비 인증 시 강원상품권을 제공하는 '혜택반GO! 강원여행' 프로젝트와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제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미친 영향과 자치의 완성

'강원 방문의 해'는 단순한 관광객 유치 행사를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립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관광객 2억 명 시대라는 비전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시군 통합 마케팅의 성공 경험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광 혁신은 강원도가 가진 규제를 넘어, 우리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한 오늘, '강원 방문의 해'는 대한민국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자치 모델로 우뚝 서는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주소는 달라도 마음은 강원, '강원생활도민'이 만드는 지역의 활력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화 가속화로 도내 시군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이다. 그간 '이사 와달라'는 식의 정주 인구 유치 정책에 매달려 왔으나, 생활권이 분리된 지리적 특성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엔 구조적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질문의 방향을 틀었다. "군이 주소를 옮기지 않더라도, 강원을 자주 찾고 머무는 사람들을 우리의 인구로 정의하면 어떨까?" 이 질문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강원생활도민 제도'다.

생활인구 1위 강원, '관계'가 '인구'가 되는 시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체류 인구의 힘이 가장 강력한 지역이다. 행정안전부 '25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결과'에 따르면 강원의 체류 인구는 등록 인구 대비 6.9배로 전국 1위이며, 평균 체류 시간과 체류인구 카드 사용액 비중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머무는 힘'에 주목했다.

지난해 5월 본격 시행된 강원생활도민 제도는 강원 외 지역에 거주하지만 강원을 사랑하는 방문객들에게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다. 가입 절차는 파격적일 만큼 간편하다. 전입 신고도, 가입비도, 실물 카드도 필요 없다. 모바일 플랫폼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누구나 즉시 강원생활도민이 될 수 있다.

제도시행 1년도 안 되어 생긴 '새로운 군(郡) 하나'

반응은 뜨거웠다. 제도 시행 100일 만에 가입자 1만 2천 명을 돌파하더니, 현재는 약 3만 3천 명에 달하는 생활도민을 확보했다. 이는 도내 인구가 가장 적은 양구군의 인구수를 넘어서는 수치로, 디지털 공간에 강원도의 새로운 시군이 하나 더 생겨난 셈이다. 가입자의 74%가 수도권 거주자라는 점은 '수도권 강원 시대'가 실현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레고랜드, 아르떼뮤지엄 등 지역의 랜드마크부터 마을의 작은 식당과 카페까지 300여 개가 넘는 제휴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거대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했다. 생활도민은 할인 혜택을 누리며 즐겁고, 민간 제휴처는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 효과를 얻는 '선순환 구조'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단순 관광을 넘어 '정주'의 마중물로

강원생활도민 제도는 이제 단순한 할인 제도를 넘어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인구등록제'의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26년부터 생활인구가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 제도는 강원도의 재정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혜택의 범위를 관광 위주에서 문화, 의료, 생활 편의 등 밀착형 서비스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유학, 워케이션(Workation), 귀농·귀촌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류'가 '정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를 놓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강원형 인구정책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소는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강원도민'입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결국 '관계'에 있다. 강원을 자주 찾고, 강원에서 소비하며, 강원의 소식에 공감하는 생활도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강원의 자산이다. 주소가 없어도, 실물 카드가 없어도 괜찮다. 강원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더 많은 국민이 강원생활도민이 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동적인 강원의 일원이 되어주시길 기대한다. 강원은 언제나 당신을 향해 열려 있다.



02

- 2026 춘천마임축제
- 강릉단오제
- 동해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 2026 태백천상의 산나물 축제
- 제59회 단종문화제
-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2026
- 제6회 저도 대문어축제



2026 춘천마임축제

기간 2026년 5월 24일(일) ~ 5월 31일(일)

장소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 축제극장몽짓 등 춘천시 전역

내용 개막난장, 아수라장, 밤샘난장 도깨비난장, 예술난장X, 극장공연, 걷다보는마임, 도깨비유랑단 등



강릉단오제

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6월 22일(월)

장소 강릉 남대천 일원

내용 영신제, 영신행차, 단오굿, 관노가면극, 난장(야시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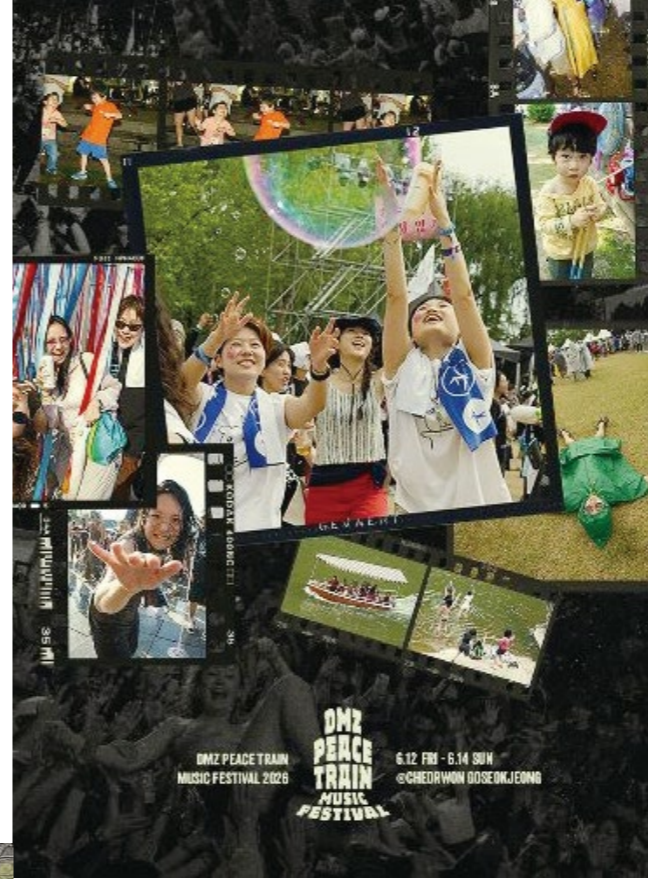


동해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기간 2026년 6월 13일(토) ~ 6월 21일(일)

장소 무릉별유천지

내용 라벤더 정원 중심 각종 공연, 네트 체험시설, 수상 레저 체험 등



DMZ PEACE TRAIN MUSIC FESTIVAL 2026

人間活動 HUMAN ACTIVITY

FRI 6.12 SUN 6.14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2026

기간 2026년 6월 12일(금) ~ 14일(일)

장소 철원군 고석정 일원

내용 평화적 가치에 대한 연대와 공감, 음악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2박 3일간의 뮤직페스티벌, 메인공연(국내외 25개 내외), 스페셜 공연, 부대프로그램 등



제59회 단종문화제

기간 2026년 4월 24일(금) ~ 4월 26일(일)

장소 영월군 관내 일원

내용 단종국장재현, 단종제향, 백일장, 전통행사(영산대제),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



2026 태백천상의 산나물 축제

기간 2026년 4월 24일(금) ~ 26일(일)

장소 장성탄탄마당 일원

내용 태백산나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 및 산나물 홍보 및 판매



제6회 저도 대문어축제

기간 2026년 6월 12일(금) ~ 14일(일)

장소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 일원

내용 개막식, 저도어장 미식체험, 문어놀이터, 어선승선체험 (문어손맛체험, 저도어장 가까이 가기), 생맥주 무료나눔 등



03

디지털 트윈 기업 '더픽트' 전창대 대표

“드론·로봇·AI 데이터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을 돕는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시작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이 있다. 강원도 춘천을 거점으로 현실 공간을 정밀하게 복제하고 그 안에서 정책과 산업의 변화를 실험하는 디지털 트윈 기업 '더픽트'다. 2017년 대학생 창업으로 출발한 더픽트는 VR과 메타버스를 거쳐 디지털 트윈과 AI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유행보다 기술의 본질에 집중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을 데이터로 뒷받침해온 점이 강점이다.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실증, 가상 공간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지역 테스트베드 전략은 '지방에서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을 보여준다. 전창대 대표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장담에 머물지 않는다. 왜 강원도였는지, 메타버스 이후 산업은 어디로 가는지, AI 시대 청년에게 창업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지방에서 일하고 버틸 수 있는 조건으로 이어진다. '지방시대'라는 말에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한 지역에서 9년을 버텨온 기술기업의 시선으로 들어봤다.



Q 대표님과 더픽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더픽트는 2017년 제가 대학 3학년 때 창업한 디지털 트윈 전문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현실의 공간과 데이터를 가상 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하고 그 안에서 정책과 산업 의사결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기업입니다.

정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결과를 예측해야 하지만, 직접 실험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하체가 원형교차로 설치를 검토할 때, 공사 전 교통 흐름 변화와 인근 상권 영향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픽트는 도로와 건물, 지형을 3차원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교통량·보행 흐름·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가 공사 이전 단계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판단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가상 공간으로 현실의 리스크를 줄이고 의사결정을 고도화하는 기업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의사결정 인프라입니다.”

Q 더픽트가 강원도에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더픽트는 처음부터 춘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창업을 시작한 곳이 이 지역이었기 때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에 남는 것이 전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자본과 인재, 정보가 몰린 곳이지만 경쟁도 치열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과도한 경쟁에 놓이면 생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기업이 자기 정체성과 문화를 다듬을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오히려 지방에서 삶의 질 문제를 더 선명하게 체감했습니다.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도 높은 주거비와 경쟁 구조 속에서 삶이 반드시 더 나아진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춘천에 자리 잡고 보니, 양질의 일자리만 확보된다면 지방 도시가 청년에게 더 높은 삶의 질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창업 초기에는 서울 이진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3~4년 차에 직원들과 논의한 끝에 지방에 남는 것이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함께 결정을 내린 구성원들은 지금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재 유지입니다. IT·지식서비스 산업은 사람이 곧 기술입니다. 인력이 계속 바뀌면 기술이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지방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인재가 오래 머물 가능성이 크고, 그 축적이 결국 기업의 기술 자산이 됩니다.



“지방에 남는다는 것은 직원의 삶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입니다.”

Q 대표님께서 현재 메타버스·XR 산업이 어떤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시나요? 이른바 ‘메타버스 거품론’ 이후, 더픽트는 끝까지 남는 기업이 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A 이른바 메타버스 거품론은 반은 맞고, 반은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시기 급부상한 캐릭터 기

반 플랫폼과 체험형 서비스는 엔데믹 이후 수요가 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단순히 아바타가 오가는 가상 세계로만 보는 것은 좁은 해석입니다.

360도 파노라마 서비스, AR 필터, 산업용 3D 시뮬레이션도 넓은 의미의 메타버스 기술입니다. 기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대가 견고하고 현실 적용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봅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가상 공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자율주행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검증됩니다. 정밀한 3D 가상 모델은 AI 훈련용

데이터 환경이 됩니다.

더픽트는 플랫폼 외형보다 기반 기술 축적에 집중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기반 공간 데이터 수집, 로봇 연동 시뮬레이션, AI 학습용 가상 환경 구축 등으로 산업 적용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기업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 더픽트가 웹 기반 메타버스와 하이브리드 MICE, 실감 콘텐츠에 집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대면 회의와

전시, 박람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오프라인 행사를 가상 공간으로 전환해야 하는 수요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당시 더픽트는 3D 기반 가상 공간 기술을 바탕으로 행사장을 디지털 환경으로 복제하고 온라인 전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행사는 다시 오프라인 중심으로 돌아왔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사 기획·운영 역량을 내부에 확보하고, 기술과 운영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내 주요 행사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현장에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MICE는 단순한 온·오프라인 병행이 아닙니다. 핵심은 행사 운영 전반의 디지털화입니다. 명찰 제작, 참가자 등록, 동선 관리, 현장 통계 집계처럼 수작업 비중이 높은 영역을 시스템화·자동화하는 구조입니다.

자동 명찰 출력, 실시간 참가자 데이터 분석, 드론 기반 안전·주차 관제, 디지털 트윈 기반 동선 시뮬레이션은 효율·안전성을 더 높입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행사 대행이 아니라 MICE 구조를 기술 기반으로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하이브리드 MICE는 오프라인 현장을 데이터로 재설계하는 모델입니다.”

Q 더픽트가 같은 메타버스·콘텐츠 기업들 사이에서 차별화되는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별점은 3D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바꾸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많은 기업이 가상 공간 구현 자체에 집중한다면, 저희는 그 공간을 움직이는 데이터에 집중합니다. 공간은 데이터와 결합될 때 비로소 정책 판단 도구가 됩니다. 최근에는 드론과 AI 비전 기술로 행사장 주변 주차장을 촬영하고, 실시간 차량 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내비게이션 플랫폼과 API로 연동하면 방문객은 행사장을 검색하는 순간 주변 주차장의 잔여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였던 동해안 연안 침식 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는 과거와 현재의 지형 데이터를 3D 가상 공간에 구현해 10년, 20년 단위 변화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보이는 정보가 되자 정책 판단의 속도와 공감도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더픽트의 경쟁력은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의 의사결정을 가속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차별점입니다.

Q 강원도에서 콘텐츠·테크 기업을 운영하며 체감하는 현실적인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A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재 채용이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의 공통 과제로 봅니다. 서울의 중소기업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 아닌 이상 인재를 직접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은 구조가 다릅니다. 핵심 리더급 인재 한 명을 확보하면 선순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실제로 판교에서 게임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대표가 춘천으로 합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무 인재는 지방 대학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은 인재가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잦은 이직은 기술 축적의 걸림돌인데, 지방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장기 근속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회도 분명합니다. 국가 균형발전 재정과 중기부 창업 지원, 지자체 프로그램은 성장 발판이 됩니다. 반면 산업 생태계 밀도와 전문 인력 풀, 대형 민간 프로젝트 수요는 수도권보다 적습니다. 결국, 저는 지방 경영이 기술 축적과 삶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매우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Q 강원도에서 창업할 때,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실증(PoC)에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는 산간, 해안, 도심 환경이 함께 공존하고 지역별 특성도 뚜렷합니다. 드론과 로봇으로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에는 이런 다양한 조건이 중요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실증을 하려 하면 유동 인구, 규제, 민원, 이해관계 등 여러 제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면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건에서 테스트베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춘천이 드론 자유화 구역

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또 지자체와의 협력 구조도 비교적 밀접합니다. 지역 기관은 지역 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 기업과의 접점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저는 강원도의 강점이 거대한 소비시장보다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시장이 아니라 테스트베드입니다”

Q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에서 일하고, 만들고, 버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지방에서 버틴다’는 말을 단순한 생존의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일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과 개인이 함께 안정적인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삶의 질입니다. 주거, 가족, 교육, 일과 삶의 균형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장기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이 측면에서 분명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직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구성원은 회사가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오래 남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조건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생활 기반은 지역에 두되 시장은 전국과 글로벌을 향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 인재 한 명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직원이 지역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급여뿐 아니라 장기 커리어, 안정적 주거, 조직 문화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지방에 남는다는 것은 생존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일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매거진」을 구독하는 청년과 지역 활동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A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취업 환경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저부가가치인 업무는 AI가 대체하고, 기업은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한번쯤 꼭 경험해볼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은 큰 성공만을 전제로 한 도전이 아닙니다. 아이템



을 기획하고 시장을 조사하며 고객을 설득하고 실패를 겪는 과정 자체가 경쟁력이 됩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본 경험은 어떤 조직에서도 차별화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창업 지원 제도가 비교적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정부 지원, 지역 보육 프로그램, 실증 기회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청년의 도전을 더 주목하고 응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색깔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면 운동장을 바꾸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지방은 버티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쟁력을 설계할 또 하나의 무대입니다.

더픽트 전창대 대표는 유행을 좇기보다 기술의 본질을 붙들고 지역에서 실증하며 성장해 온 기업가다. 지방에서도 기술기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차분한 실행으로 증명하고 있다.

04

시도 이슈 & 뉴스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전국의 이야기
Here & Connect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행 재개 서울 수변교통의 새로운 가능성

한강은 서울의 지리적 중심이자 도시의 시간과 감성을 축적해 온 공공적 수변축이다. 봄철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한 한강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복귀를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읽게 하는 체험형 이동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육상 교통의 혼잡과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 강 위를 따라 이동하는 경험은 목적지 중심의 통행을 과정 중심의 체류로 전환시킨다. 즉 한강버스는 '이동'과 '관광', '교통'과 '경관 향유'를 결합한 서울형 수변 모빌리티 실험이라 할 만하다. 망원선착장에서 출발해 여의도선착장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이러한 특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출발지인 망원 일대는 서울함공원,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등과 연계되어 도심형 생태·문화 자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승선 전 대기 시간조차 한강 조망과 휴식의 시간으로 전환된다. 배에 오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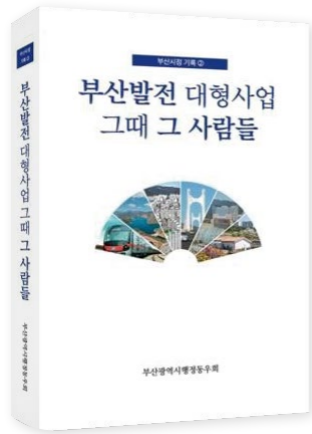
창가와 갑판에서 마주하는 강변 풍경은 서울의 일상을 낯설고도 새롭게 재구성한다. 차량 소음과 붐빔에서 벗어나 물 위에서 바라보는 도시는 높이 경쟁의 스카이라인보다 흐름과 여백, 강과 하늘의 관계로 읽힌다. 도착지인 여의도에서는 또 다른 층위의 도시 경험이 펼쳐진다. 한강공원의 개방감, 63스퀘어에서 내려다보는 수직적 조망, 셋강생태공원의 자연적 완충 공간은 서울이 단순히 밀도의 도시가 아니라 자연과 인공, 휴식과 이동, 일상과 여유가 중첩된 복합 공간임을 보여준다. 여정 중 마주하는 강변 자전거길과 벚꽃길, 야외 카페와 쉼터는 시민이 도시와 관계를 맺는 순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결국 한강버스는 서울의 봄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시를 가장 천천히 깊이 음미하게 하는 공공적 플랫폼이다.



1 한강버스 포스터
2 한강버스 운행재개
3 망원선착장2층 라면 체험존

부산 대형사업 40년 결정의 순간을 기록하다

도시는 도면으로 설계되지만, 결국 사람의 결단과 설득, 책임이 쌓일 때 완성된다. 최근 발간된 『부산발전 대형사업 그때 그 사람들』은 부산의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과 목록'이 아니라 '사람의 기록'으로 복원한 시정 아카이브다. 부산광역시 행정동우회가 펴낸 두 번째 시정 기록서로, 오랫동안 부산 시정을 취재해 온 언론인들이 각 사업의 설득 과정과 결정, 갈등과 조정의 흐름을 꼼꼼히 담았다. 책은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당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설 뻔한 하수 처리장을 외곽으로 옮긴 사례, 환경단체 반대와 시민 의견 수렴 등 우여곡절 끝에 광안대교가 기술 실험장이자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과정, 센텀시티 개발에서 여러 민선시장이 바통을 이어 사업을 완주한 사례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캠프 하리아아 반환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전환한 과정에서는 고위 간부의 명분 싸움과 실무진의 신뢰 구축이 함께 작동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된다. 현장 공무원들의 증언과 참여자 인터뷰는 기록의 신뢰성과 사료적 가치를 높인다.



부산시정 기록서인
『부산발전 대형사업 그때 그 사람들』 표지

총 402쪽 분량의 책은 대형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기술이나 속도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 신뢰였음을 환기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개통, 상·하수도망 현대화,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해상 순환고속도로, 센텀시티 개발, 부산시민공원 조성 등 6개 대형 사업의 결정 과정과 갈등, 조정의 기술을 따라가며,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나”를 이해하게 하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책은 각 사업이 기술적 문제와 예산 규모만으로 설명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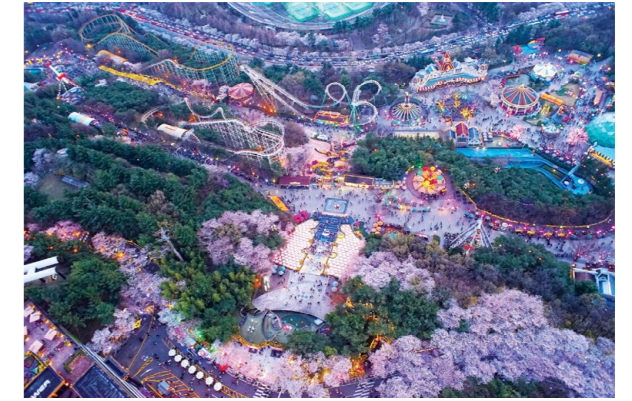
없는 이유를 밝히며, 도시 행정과 정책 결정에서 인간과 관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행정가와 정책 연구자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도시 계획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된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질문 가능한 행정의 교본으로서 다른 도시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힘이 결국 사람과 협력, 소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기록물이다.



1 내·외 순환도로
2 센텀시티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대구, 가장 먼저 피는 봄

花無十日紅. 꽃은 열흘 붉게 피지 않는다. 벚꽃은 도시를 분홍빛으로 물들이며 덧없음과 동시에 극대화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순수하고 담백하며, 정신적 사랑과 고귀한 영혼을 담은 벚꽃은 한국의 청춘들에게 개강과 중간고사처럼 잠깐 스쳐가는 순간의 설렘을 떠올리게 한다. 찰나의 빛깔과 향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매년 봄마다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는 도시다. 남부내륙의 따뜻한 햇살과 포근한 바람 덕분에 3월 말이면 도심 전체가 연분홍빛 물결로 뒤덮인다. 달서구 두류공원 내 월드 테마파크에서 열리는 ‘블라썸 피크닉’은 벚꽃의 찬란함을 가장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벚꽃 향과 흩날리는 꽃잎이 방문객을 맞



대구 이월드 전경

이하며, 첫 걸음부터 마음을 설레게 한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햇살에 반짝이는 꽃잎과 부드러운 바람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움직임이 마치 도시 전체가 살아 숨 쉬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공원 전체를 가득 메운 벚나무 군무는 여의도 윤중로보다 세 배 이상 장관을 이루며, 낮의 산책과 피크닉은 자연과 인간의 감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만들어낸다. 연인과 친구, 가족들이 잔디에 앉아 나른하게 피크닉을 즐기는 동안,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꽃잎들은 각자의 시선과 몸짓 속으로 스며들어, 하루의 기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해가 지면, 벚꽃은 또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레인보우 블라썸 라이팅 쇼가 공원을 물들이며, 분홍빛 꽃잎과 형형색색 조명이 어우러진 장면은 마치 별빛 아래 벚꽃이 춤추는 듯한 장관을 만들어낸다. 메가스윙과 롤러코스터를 타며 느끼는 바람과 꽃향기는 낮과는 전혀 다른 설렘과 긴장감을 제공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조명과 향기, 꽃잎의 움직임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공간 속을 함께움직이는 참여자가 된다. 벚꽃의 짧지만 화려한 군무, 낮과 밤의 변신, 공간을 가득 채우는 향기와 빛, 사람들의 발걸음과 웃음소리. 모든 것이 어우러져 블라썸 피크닉은 단순한 꽃놀이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정서, 도시환경이 교차하는 체험형 플랫폼으로 완성된다.



대구 83타워 한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탑

도시의 여가를 다시 설계하다 스타필드 청라 복합도시 실험

세계 최초로 멀티 스타디움(돔구장)과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결합한 '스타필드 청라'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신세계그룹이 내놓은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업시설 개발을 넘어, 스포츠와 문화, 엔터테인먼트와 관광, 체류와 소비를 하나의 동선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도시형 복합 인프라 구상으로 읽힌다. 인천경제청은 스타필드 청라를 청라국제도시의 핵심 랜드마크이자 수도권 차세대 여가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다. 핵심 시설은 약 2만1천 석 규모의 돔구장이다. 이 공간은 프로야구 경기뿐 아니라 K-팝 공연, 해외 아티스트 내한 무대, e스포츠 국제대회, 각종 전시와 문화행사를 연중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스타디움으로 설계됐다. '경기 없는 날에도 사람이 찾는 경기장'이라는 발상은 스포츠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도시의 문화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은 이 시설이 개장할 경우 연간 2,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과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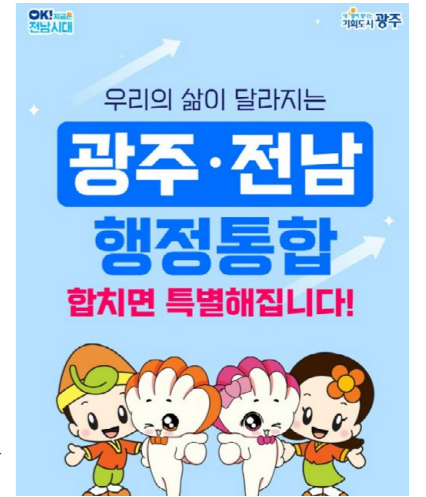
규모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 부지는 인천 서구 청라동 6-14 일대 약 16만5천m², 연면적 약 50만 m² 규모로, 지하 3층~지상 6층의 대형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최근 멀티스타디움 설계 변경에 대한 경관상계획 심의를 마쳤고, 현재는 지하 터파기와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관계 기관 협업 아래 지상층 건축 변경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지상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목표 준공 시점은 2027년 말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쇼핑과 스포츠 관람에만 머무는 공간이 아니다. 호텔, 인피니티풀, 다이닝바, 식음료 시설 등을 결합해 방문 자체가 체류형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프로젝트의 본질은 대형 유통시설 신설이라기보다, 도시의 여가 구조를 '목적형 방문'에서 '머무는 경험'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있다. 산업 기반만으로 도시 경쟁력을 설명하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문화와 경험, 체류와 소비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하느냐가 도시의 매력을 좌우한다.



1 스타필드 청라 조감도
2 인천 스타필드 청라
3 스타필드 청라 돔구장 조감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본격화 정부 로드맵 가동!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 준비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특별법 공포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협의 자리로,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양 지역 실무진이 함께 통합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정부는 조직 정비, 재정 구조 조정, 자치법규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등 핵심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산업, 교통, 주거, 생활 인프라를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



행정통합 포스터

히 통합 논의가 실제 행정 효율과 주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직 통합의 속도 못지않게 지역 간 이해조정과 균형 있는 기능 배분이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와 양 지자체가 제도 정비와 현장 소통을 병행할 수 있을지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인다. 통합의 성패는 결국 주민 수용성과 의회 협력 수준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발'에서 트램 도시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본격화

조선시대 '한발'으로 불린 대전은 예로부터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중부권 교통의 요충지였다. 넓은 들판 위에 형성된 지형과 경부선 철도, 전국 도로망 확충은 대전을 남북과 동서를 잇는 중심 도시로 성장시켰다. 이러한 역사 위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 본격 공사 단계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3월부터 잔여 5개 공구에 대한 본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차선 통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지만, 이번 사업은 자동차 중심 도시 구조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일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대전의 미래 교통축을 다시 짜는 이번 트램 사업이 도시 경쟁력과 생활



대전 도시철도에 도입될 수소트램 이미지

권 변화를 어떻게 이끌지 주목된다. 진잡과 정부청사, 가양 등 주요 구간을 잇는 노선이 현실화되면 도심 연결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공사 과정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시민 체감 효과를 얼마나 빠르게 보여주는지가 사업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대전의 도시 구조와 생활 환경을 재설계할 변화의 축으로 읽힌다. 이제 첫걸음이다.

울산광역시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으로 미래 배터리 산업 거점 도약

정부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지원 사업으로 울산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구축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이 추진하는 황화리튬 생산 기반 첨단 소재 공장에 정책금융 지원을 확정했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저리 금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높여려는 시도다.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 미래 전기차 시장의 핵심 기술로 꼽



이수화학 울산공장

힌다. 울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존 주력 제조업 도시를 넘어 차세대 배터리 소재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전기를 맞고 있다.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의 상징적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의 정책금융과 민간 기업 투자가 맞물리면서 울산이 미래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생산기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산업 생태계 확장 기대도 높다.

세종 특별자치시

'97년생 충녕이 AI와 캐릭터가 만든 공공 홍보의 새로운 실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홍보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시 대표 캐릭터 '젊은세종 충녕'을 활용한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시리즈 '97년생 충녕이'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새로운 공공 커뮤니케이션 실험에 나섰다. 세종대왕의 출생연도인 1397년에서 착안한 충녕이는 '1997년생 사회초년생 공무원'이라는 설정을 입고 역사성과 MZ 감성을 결합했다. 캐릭터 구현과 시나리오, 음성, 배경음악 등 제작 전반에 생성형 AI를 활용해 효율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공공 홍보가 단순 전달을 넘어 스토리와 캐릭터, 기술을 결합한 참여형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



세종시 '97년생 충녕이' AI 기반 새 콘텐츠

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종시는 이를 통해 행정 메시지를 보다 친숙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신입 공무원의 시선으로 시정을 풀어낸 점도 눈길을 끈다. 딱딱한 행정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소통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공공 홍보의 문법도 달라진다. 행정을 더 가깝게 만들고, 시민 접점도 넓힌다.

경기도

경기도 '현금 없는 버스' 정책 확대와 대중교통 운영 혁신

경기도가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을 카드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을 확대 추진 한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현금 결제 방식을 폐지하는 행정적 조치를 넘어,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과 데이터 기반 교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성남·용인 등 도내 80개 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차량 내 현금함을 철거하고 교통카드와 모바일 결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광역버스 41개 노선과 시내버스 39개 노선이며, 정책 시행 이후 운영 성과와 이용자 반응을 분석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정책은 지난해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범 사업에서 출발했다.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먼저 도입된 결과, 현금 승차 과정에서 발생하던 정차 지연 및 요



경기도 현금없는 버스

금확인 과정에서의 갈등 상황이 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현금 결제 과정에서 요구되는 거스름돈 처리와 요금 확인 절차가 줄어들면서 정류소 정차 시간이 단축되고 운행의 정시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에서 중요한 요소인 운행 안정성과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금 관리와 관련된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버스 회사는 현금 수거, 정산, 보관 및 보안 관리에 상당한 행정 비용을 투입해 왔는데,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리 비용은 오히려 비효율적 구조로 지적되어 왔다.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은 이러한 관리 비용을 줄이고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정책 시행 이전부터 버스 차량과 정류소에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버스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교통카드 오류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납부 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의 대체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의 정책적 의미는 결제 방식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의 이번 정책은 스마트 교통 체계로 전환하려는 제도적 실험이라는 점에서 도시 교통 정책의 중요한 사례로 주목된다.

26년 4월 1일부터
이 노선은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사용해주세요!

From April 1, 2026,
this route will no longer accept cash.
Please use a transportation card or bank transfer.

自2026年4月1日起, 本线路不再支持現金支付。
请使用交通卡或银行转账。

요금
계좌이체
해주세요!

현금없는 버스 운영 안내 포스터

충청북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개통 지역 경쟁력의 전환점

충북은 오랜 기간 국도 중심 이동 체계에 의존하며 수도권과 남부권 접근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경부·영동·중앙 등 국가 간선 고속도로가 수도권과 대도시를 직선적으로 잇는 동안, 충북 북부권은 주요 교통축과 직접 연결되지 못한 채 분기점을 통한 우회 구조에 머물렀다. 그만큼 청주·충주·제천은 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생활상의 제약을 감수해야 했다. 2025년 말 전 구간 개통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이러한 한계를 바꾸는 전략적 인프라다. 청주, 음성, 충주, 제천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잇는 이 노선은 기존 국도 대비 통행시간을 40~50% 이상 줄이며 내륙권을 하나의 생활·경제·물류 벨트로 묶는 기반을 만들었다. 여기에 2026년 2월 개통한 충주 삼방교차로는 주덕읍과 인근 지역의 본선 접근성을 높여 일상 이동의 편의와 귀성·귀경 부담 완화에도 힘을 보탤다. 이 도로는 수도권 직결 노선은 아니지만 충북 내륙을 생활권·산업권·관광권으로 통합하는 교통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부·

호남선이 전국 물류망의 대동맥이라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지역 간 상호 접근성과 통근·통학, 외부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보완 축에 가깝다. 청주~충주 이동시간이 90분대에서 50분대로 줄며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됐고, 산업단지·관광지·주거지 간 접근성도 크게 높아졌다. 이는 도로 주변 토지 가치와 산업단지·물류시설 입지 경쟁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도로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충북 내륙권의 공간 구조와 지역 경쟁력을 다시 짜는 내륙 교통혁명의 출발점이라 할 만하다. 수도권과 강원권, 남부권 사이의 교차 거점으로써 충북의 위상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외부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 인구 이동의 재편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이번 도로 개통은 단순한 이동시간 단축을 넘어 충북이 스스로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읽힌다. 앞으로 청주와 충주, 제천이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산업·주거·관광 전략을 얼마나 정교하게 짜느냐가 성과를 가를 것이다. 도로의 가치는 이제 활용에서 증명된다.



1 충북 청주와 제천을 잇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모습
2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청남도

충남 농어민수당 농촌 정주와 지역경제 안정화 전략

충청남도가 2026년 농어민 수당을 본격 시행하며 농어촌 소멸 위기와 고령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공동체를 지키며 지역경제 순환을 높이려는 데 의미가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한 실제 현업 종사자다. 접수는 2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충남도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취약한 농어민을 중심으로 지원되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부정 신청자 등은 제외한다. 농어민 수당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정



충남 농어민 수당 포스터

주 여건을 지키고 농어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 생존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겹친 농어촌 현실에서 이 정책이 생활 안정과 공동체 유지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현장 안내와 홍보도 함께 진행하며, 자격 검증도 병행한다.

전북 특별자치도

성장 전략의 시대 새만금·RE100·광역철도 구상이 집행 단계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성장 전략이 이제 계획을 넘어 집행의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새만금 개발 재편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 구상이 중앙정부 정책과 맞물리며 보다 구체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수소, AI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유치하려는 전략은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려는 시도다. 완주의 수소 상용차 산업 기반과 그린수소 생산 역량을 연결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주목된다. 여기에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잇는 광역철도 구상은 산업과 물류, 정주



새만금 로봇·수소·SI 시티 투자협약식

여건을 함께 끌어올릴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결국 전북의 미래 전략은 비전 제시를 넘어 속도와 실행, 투자 유치 성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섰다. 재생에너지와 제조업, 교통 인프라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낸다면 전북은 친환경 산업 전환의 실험장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성패는 실행력과 연결성에 달렸다.

전라남도

꽃길 따라 바다를 걷다 여수 하화도 '꽃섬길' 봄 여행

전라남도 여수 앞바다의 하화도는 이름 그대로 '꽃섬'이라 불리는 작은 섬이다. 봄의 진달래와 유채꽃, 여름의 원추리, 가을의 구절초까지 계절마다 다른 꽃이 이어지며 섬 전체가 거대한 정원처럼 변한다. 이 섬의 대표 명소는 총 5.7km 길이의 '꽃섬길'이다. 선착장에서 출발해 해안선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둘레길로, 약 3시간이면 천천히 완주할 수 있다. 길은 완만해 누구나 걸을 수 있고, 바다와 절벽, 들꽃 풍경이 번갈아 펼쳐져 걷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특히 협곡 위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꽃섬다리'는 하화도의 절경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꼽힌다. 하화도는 단순한 섬 여행지가



전남 고흥, 해수부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

아니라 꽃과 바다, 길과 풍경이 어우러진 남해안의 감성 트레킹 명소다. 전망대에 오르면 여수 앞바다와 고흥 외나로도까지 시원하게 펼쳐지는 조망도 만날 수 있다. 계절 따라 다른 표정을 보여준다는 점도 이 섬만의 큰 매력이다.

경상북도

김천 교동 연화지 벚꽃 시즌 안전관리의 체계화와 관광서비스 고도화

김천시가 벚꽃 개화기에 맞춰 교동 연화지 일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봄 관광 수용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교동 연화지는 매년 많은 방문객이 찾는 김천의 대표 벚꽃 명소로, 최근에는 야간 촬영지로도 주목받으며 관광 수요가 더욱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일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교통안내 인력 배치와 주정차 질서 유지, 주차 안내, 차량 흐름 분산에 나서고 있다. 연화지 내 시설물 안전 점검과 쓰레기 관리, 식품위생업소 점검도 병행해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사 운영을 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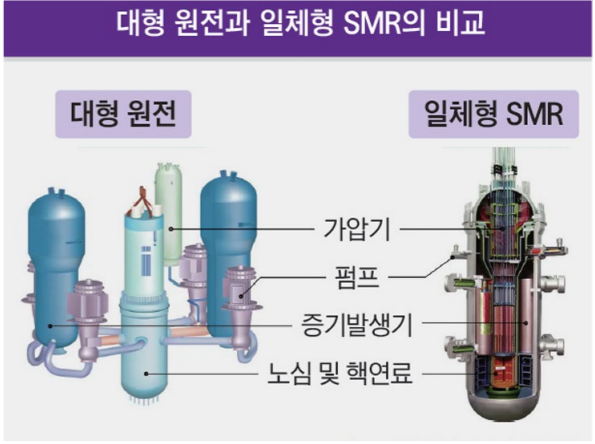
김천 교동 연화지

어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이려는 현장형 관광행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벚꽃 절정기에 집중되는 인파를 질서 있게 분산하고 체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가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천시의 이번 대응은 봄철 명소를 안전하게 즐기도록 돕는 기본 인프라 관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도시 이미지도 살린다.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승부수 SMR 세계 허브를 향하다

경상남도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미래 전략산업의 전면에 세우며 글로벌 제조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을 발판으로 5,412억 원 규모의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중심으로 집적된 340여 개 원전 기업의 제조 역량을 결집해 차세대 원전 공급망의 핵심 허브를 노리고 있다. SMR은 안전성과 유연성이 높고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으로 확장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평가된다. 경남의 이번 전략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설계·제작·검사·인증·인력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세계 시장 선점을 둘러싼 경쟁이 빨라지는 가운데, 경남이 제조 강점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의 새 축을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특히 제작지원센터와 연구개발, 기업 맞춤형 지원이 현장 성과로 이어질 경우 지역 주력산업의 체질 전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원전 산업의 부활을 넘어 미래 전력시장 선점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실행력이 관건이다.

제주 특별자치도

5만 년을 품은 분화구 하논분화구 핵심 사유지 21

제주 서귀포 하논분화구가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제주도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 198억 원을 투입해 핵심구역 내 사유지 527필지, 약 21ha를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하논분화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르형 화산체로 지질·생태·경관 가치가 모두 뛰어난 제주의 대표 자연유산이다. 동서 1.8km, 남북 1.3km 규모의 타원형 분화구와 수만 년에 걸쳐 쌓인 퇴적층은 고기후와 고식생 변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연 기록물로 평가된다. 이번 토지 매입은 단순한 보상이나 개발 제한에 머무르지 않는다. 연구와 교육, 탐방 동선 재구성, 복원 구간 설계까지 가능하게 하는



옛 모습을 그래픽으로 재현한 '태고의 하논'

장기 관리 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전과 활용을 함께 설계하는 이번 조치는 하논분화구를 제주 자연유산 관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연을 지키는 일이 곧 미래 자산을 준비하는 일임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제주의 보전 정책이 이제 보상 중심을 넘어 전략적 복원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분명해졌다.

05

- 지방 4대 협의체 사무총·차장 간담회
- 지자체 일본·중국 교류 담당관 회의
- 국제관계지원실장 이장근 대사 임명
- 제21기 지방시대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지방 4대 협의체 사무총·차장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지난 1월 23일 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방 4대 협의체 사무총·차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년을 맞아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차장들이 참석해 각 협의체 간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협의회 사무처의 세종 이전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행정통합 관련 정책 대응, 지방의회 조직체계 개선 등 주요 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또한 중앙-지방 간 제도 협의 채널 강화와 협의체 간 정례 협력회의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 4대 협의체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협의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과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자체 일본·중국 교류 담당관 회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6년도 지자체 일본·중국 교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일본·중국 교류 담당관 회의」를 각각 개최하였다. 중국 교류 담당관회의(2026.1.30.)는 15개 시도, 29개 시군구에서 총 46명, 일본 교류 담당관회의(2026.2.10.)는 12개 시도, 11개 시군구에서 총 28명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 교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교류계획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현안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중국 및 일본 정세와 한중·한일 관계 동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통해 최근 국제환경 변화와 지방외교 추진 시 유의사항을 공유하였다. 또한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과 연계한 교류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외교부와 유관기관의 정책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2



1



3



4

1,4 중국교류 담당관 회의
2,3 일본교류 담당관 회의

이어 각 지자체는 2026년도 중국·일본 교류 추진계획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교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특히 청소년·문화·경제 분야 등 실질적 교류 확대 방안과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 전략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한 실무 중심 회의로 운영되었다. 협의회는 매년 중국·일본 교류 관련 정보 제공과 정책 공유를 위해 회의를 정례 개최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자체의 대외교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간 우수사례 확산과 공동사업 발굴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지방외교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국제관계지원실장에 이장근 전 아세안 대사 임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장근 전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를 2026년 2월 23일자로 국제관계 지원실장에 임명했다.

이 실장은 외무고시 25회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정통 외교관으로,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주방글라데시 대사 등을 역임하며 34년간 양자·다자 외교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주아세안대표부 재임 기간에는 한-아세안 관계의 질적 도약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로 격상되는 과정에 기여했으며,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의 외연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실장의 풍부한 국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지방외교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국제관계지원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외 협력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이 이장근 신임 국제관계지원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제21기 지방시대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서울에서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월 26일(목) 오전 10시 서울 ENA Suite Hotel에서 ‘제21기 지방시대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서포터즈 67명과 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협의회 기능 소개, 향후 활동 안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발된 제21기 서포터즈는 오는 3월부터 8개월간 각 시·도의 주요 정책과 문화, 지역 발전 현황 등 ‘지방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청년의 시각에서 재조명한다. 특히 SNS 콘텐츠 제작과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지역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포터즈 여러분은 대학생의 참신한 시점에서 지방시대와 17개 시·도의 생생한 현장을 알리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서포터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 간담회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활동 종료 후 성실히 참여한 서포터즈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표창과 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서포터즈가 제작한 창의적인 콘텐츠는 협의회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어 대국민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21기 지방시대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단체사진

06

- 이재명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과제 및 쟁점
- ‘기본사회’정책 동향과 이슈

이재명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과제 및 쟁점



김병남
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국정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외에도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정과제는 ‘[국정과제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현안과제의 경우 최근 발표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의제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확충 수단별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된 국정과제 및 현안과제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정과제 53]의 주요내용 및 세부과제
2025년 9월 발표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국정과제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목표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주민참여 확대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투명성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지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한 세부과제로 5극3특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기능 조정, 지방 세입확충 강화 등을 연계한 국세-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 추진이 제시되어 있다. 국고보조사업 혁신에 관한 내용 또한 포괄보조 확대

및 보조사업 특성을 반영한 국가-지방 간 합리적 역할 조정으로 세부과제가 설정되어 있다. 해당 국정과제의 주관부처는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現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세부과제는 먼저 행정안전부의 경우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지방세 7:3 달성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45%까지 상향하고 동시에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상향, 실질적 포괄보조 발굴·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결정시 지방정부 의견수렴의 무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반면, 기획재정부(現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는 지역균형성장 지원을 위해 '초광역단위 사업지원 특별계정(이하,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초광역특별계정 및 지특회계의 자율계정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공모방식 개선, 국고보조금 절감분 유사사업 활용 등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현안과제의 주요내용 및 부처별 정책동향

국정과제의 큰 축인 '5극3특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2025년 11월 대전·충남의 공동선언문 채택 이후, 광주·전남, 대구·경북에서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며 현재 국회에 이들 지역의 행정통합에 대한 관계 법률안이 소관위심사 중에 있다. 이처럼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16일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며 실행방안으로는 인센티브 성격의 (가칭)행정통합 교부세 또는 지원금 등을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통합 광역자치단체 관련 법률 3건이 발의된 만큼 재정지원은 연간 15조 원, 4년간 최

대 60조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운영,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의 과제의 쟁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정과제 53]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現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가 소관부처이나 내용은 서로 상이하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외에도, 행정비용의 보전 성격인 지방교부세 확대, 중앙-지방 기능 조정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다양한 재정분권 정책이 담겨있다.

반면, 기획재정부(現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의 경우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자율성 측면보다는 초광역특별계정 설치를 위시하여 중앙의 관리·지원·통제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방재정을 관리하도록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는 지방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각 소관부처에서 분권과 집권으로 상반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한편, 현안과제인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것은 없으나 연간 15조 원, 4년간 최대 60조 원이라는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15조 원은 현행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약 5%p 인상하였을 때 나타나는 지방재정 순증효과와 유사하다. 더불어 재정분권 TF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는 각각 별도의 TF로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4년간 최대 6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두 TF 간 정책조율이 필요하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각각의 정책은 지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책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각 부처 및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기본사회'정책 동향과 이슈



허유경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I. 들어가며

정부는 국정과제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국정77)'를 제시하고,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본사회 추진체계란, 기본사회기본법 및 종합계획,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기본사회위원회 운영 등을 말한다. 기본사회는 국가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다. 이는 그동안의 우리 사회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한 반면에 사회적·지역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사회안전망은 충분치 못해 국민 삶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문제 인식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그간의 기본사회 정책 논의는 정치권

의 담론 설정 및 실제 현장에서의 정책 실험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경기도지사 당시(2018-2021)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지급을 통한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2022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증가, 사회적 교류, 삶의 만족도 등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으로 발전해 최근 전국 10개 군이 선정되어 추진 예정에 있다.

기본사회에 관한 논의는 이제 국정과제 반영을 토대로 한 실무 정책 추진 및 입법 단계로 진입했다. 본 글은 최

근 추진되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출범,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II. 기본사회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1. 기본사회위원회 추진 현황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으로는 ①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②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③ 관련 정책(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정책 등)의 추진 ④ 법·제도 개선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 ⑥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등이 있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4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으로 중앙행정기관 장관 16명과 시도 및 시·군·구 협의체 대표 4명 및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된다. 조직으로 분과·전문·특별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단,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사전검토 및 조정 후 본회의에서 심의·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본사회와 관련된 각 기관별 역할과 현재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유관 중앙부처, 지방정부,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사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후에 하위법령 제정 등 법

령 정비, 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 실무위원회를 통한 안건 사전검토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관 중앙부처는 기본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각 분야별로 기존 정책을 개선 및 강화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예컨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등과 적극 소통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설계하여 추진한다.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2026년 1월 27일에 공포 및 시행된「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2026년 2월) 부위원장 및 위원 위촉 등을 거쳐 2026년 1분기 내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논의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의 추진체제로 우선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공포·시행을 통해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본사회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기본법안은 현재 2026년 1월 6일에 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 법안(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과 2026년 1월 23일에 최혁진·김우영 의원 대표 발의 법안(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이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신정훈 의원 안, 2026.1.7.; 최혁진·김우영 의원 안, 2026.1.26.)되어 있다.

기본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① 기본적 생애소득 보장 ②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 제공 ③ 정책 추진에 있어 충

분한 국민의견 수렴 ④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등이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시도 기본계획, 부문별 기본사회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기본사회 종합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회보장 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3. 지방정부 기본사회 정책 추진 현황

행정안전부는 2026년 상반기 동안 정책분야별 추진방안 등을 담은 ‘기본사회 실현방안’ 마련, 기관별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사회기본법안에도 시범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사회에 관한 그동안의 정책실험은 주민의 삶과 직접 닿아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그 중 ‘농어촌 기본소득’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새정부 출범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시작해 2026년 2월부터 선정된 10개 군 주민에 대해 지급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및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5년 9월에 공모를 실시하고, 10월에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선정했다. 이후 12월에 충북 옥천, 전남 곡성, 전북 장수의 3개 군이 추가로 선정되어 최종 10개 군이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의 주민에게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년 간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재원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마련한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후,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는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증가이다. 시범사업 선정 후인 26년 10~12월의 3개월 동안, 경북 영양군(5%), 강

원 정선군(4.8%), 경남 남해군(3.8%), 전북 순창군(3.6%), 경기 연천군(3.2%)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 신안군은 특히 시범사업 선정 후, 9.5%가 신규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의 경우,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추가해 월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기에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림수산물부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을 조직하여 시범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원 중이다. 그 외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40여명의 평가단을 구성해 시범사업 평가 작업에 나서고 있다.

III. 향후 과제 및 제언

기본사회는 그간의 정치적, 정책적 실험 단계에서 새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 반영을 거쳐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및 출범 등 실무 정책 설계,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같은 입법 추진 단계로 이어져왔다.

여기에서는 기본사회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기본사회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및 하위 법령의 신속한 정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정책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본사회 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의 제정 없이는 관련된 정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 지방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기본사회 관련 우수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은 추진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삶 개선과 직결되어 있기에 그동안 실질하게 관련 정책을 개발·추진해 온 지역의 아이디어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유용한 동력이 될 것이며,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그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



에이전틱AI,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질문하는 AI'에서 '일을 맡기는 AI'로

AI는 이제 '답하는 도구'를 넘어 '일하는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 목표를 제시하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결과를 점검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묻느냐가 아니라 AI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AI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우리가 익숙한 AI는 질문에 답하고 검색·요약·문장 작성을 돕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AI는 목표를 주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했다.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행위 주체(agent)가 되고 있다.

에이전틱 AI는 무엇이 다른가?

핵심은 단순하다.
• '질문 → 답변' × • '목표 → 계획 → 실행 → 점검 → 수정' ○
사람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AI가 업무를 나누고 순서를 정해 결과를 정리한다. '한 번 쓰는 AI'가 아니라 '계속 일하는 AI'다.

이미 현실이 된 에이전트형 AI

에이전틱 AI는 "답"을 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업무를 끝까지 처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OpenAI	Anthropic	Microsoft	Google
ChatGPT	Claude	Copilot	Gemini
목표를 주면 업무를 나누고 초안 → 수정 → 형식 정리까지 이어간다.	긴 문서에서요약을 넘어 정점-누락을 짚는다.	문서-메일-회의를 연결해 후속 작업까지 이어준다.	자료 수집 → 정리 → 브리핑 문서 작성에 강하다.

이들은 더 이상 "무엇을 도와줄까요?"가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처리해도 될까요?"라고 묻는다.

AI 사용 방식의 변화... 조직의 역량도 달라진다

AI 활용의 격차는 '질문'이 아니라 업무를 나누고 설계하는 방식에서 벌어진다. 에이전틱 AI는 개인 생산성을 넘어 조직 운영 방식까지 바꾼다. 반복 업무는 자동화되고, 업무 표준을 AI에 맡기는 흐름이 강해진다. 결국 성과는 개인 능력보다 조직이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시대

Vol.138 | 2026. 03

강원특별자치도 편

지방시대 매거진은 협의회 홈페이지(www.gaok.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 2026년 3월 10일(제138호)
발행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발행대행 | 지방자치연구소(주)
주소 |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문의 | 02-2170-6092
편집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외협력부

